

재계, JY 사면 거론 여부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면 '韓美회담'서 계속

文, 백신·경제협력 당부 전망 재계, 공정경제3법 규제 완화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요청할 듯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백신·경제 협력 성과 관련 후속 조치를 4대 그룹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내부 회의 등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후속 조치 실행'을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로 기업이 관심 가져야 하는 이슈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찬 회동에서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찬 회동에서) 기업 측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재계 측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원'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대규모 지원 방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재계 측에서 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의 경우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만큼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에 관한 것은 공식적으로 형식을 갖춰 이미 대한상의 등에서 건의한 것이기에 (오찬 회동에서) 말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수출·협력사 등 韓경제도 타격 '불가피'

〉1면 '반도체 전쟁'서 계속

반도체·전산업 생산지수 감소

아래에서는 빠르게 치고 오르는 분위기다. 대만 UMC가 전분기 대비 5% 성장을 기록하며 점유율 7%를 지켰다. 여전히 14나노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영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S MIC도 12% 성장으로 다시 5%로 올라섰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경제에도 '뇌관'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반도체 생산 지수가 10.9%나 하락하며 1년내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덩달아 전산업 생산지수도 111.4로 -1.1%로 하락전환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지만, 반대로 메모리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뿐 아니라 투자, 협력사 등 전체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삼성전자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반도체 비전 2030에 이어 최근에는 추가로 투자를 결정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만 171조원을 쏟아부게 됐다. 아직 위치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도 19조원을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기로 정부에 약속한 상태다.

문제는 TSMC가 오히려 더 '초격

차'에 나서고 있다는 것. 당장 앞으로 3년간 투자금액만 110조 이상으로 연간 투자액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2배에 달한다. 그 밖에도 애리조나 3나노 라인 증설과 일본 연구센터 등 투자 발표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를 더 멀리 따돌리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더이상 여력이 없어 보인다. 당장 메모리 기술 격차를 지키고 TSMC를 따라가기도 벅찬 모습.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정세 변화 등에 휘말려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M&A 적기라는 말이 나오지만, 당장 나서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라서 결정을 내릴 주체가 없어서다. 최근 '대규모 M&A'를 거론한 만큼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지만, 이 부회장 거취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칫 좋은 매물을 놓치거나, 불필요하게 비싸게 사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성과를 내려면 IP를 확보하거나 생산 시설을 고도화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규모 M&A가 그 중 한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포스코, 미래 먹거리로 '친환경 산업가스' 쫓

한국화학연구원·RIST·TEMC와 4자 컨소시엄 발족, 업무협약 체결 연구개발 협력하고 본격 사업화

포스코가 친환경 산업가스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한다.

포스코는 1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본원에서 한국화학연구원·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TEMC와 4자 간 컨소시엄을 발족하고 '저온난화지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식각가스 및 냉매가스 제조기술 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가스는 제조업, 반도체,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가스를 말한다. 반도체 산업에 쓰이는 식각(에칭) 가스는 회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교하게 깎아내는 핵심 소재고, 냉매 가스는 냉장고·에어컨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인 식각 가스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아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이 크고, 냉매 가스 가운데 오존층 파괴 위험이 높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2030년부터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 규제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지수와 오존층 파괴 위험을 낮춘 친환경 식각·냉매 가스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저온난화지수 식각·냉매가스 시장은 2019년 9조원 규모였지만 2023년 15조원으로 연평균 13%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친환경



(왼쪽부터)유원양 TEMC(티이엠씨) 대표, 유병욱 포스코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 유성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이 1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본원에서 '저온난화지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식각가스 및 냉매가스 제조기술 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포스코

경 식각가스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포스코를 포함한 컨소시엄은 오존 파괴 위험이 없고 지구온난화지수를 현저하게 낮춘 친환경 산업가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가스 순도에 따라 고순도는 식각 가스로, 일반 순도는 냉매 가스로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산업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은 친환경 가스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RIST는 개발 기술의 규모 확대(Scale-up) 연구를 수행한다. 포스코와 TEMC는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가스를 생산하고 2025년까지 상용화해 국내외 반도체 제작사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한국화학연구원과 RIST가 협력하던 탄소자원화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보유한 탄소포집활용(CCU) 기술을 고도화해 제철부생가스에서 일산화탄소를 분리한 후 화학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자원화하는 연구를 지속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병욱 포스코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은 "포스코는 현재 제철공정에서 발생한 잉여가스를 산업용으로 판매하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 향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친환경 가스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역시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분야 국내 유일 출연연구원으로서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며 "화학연의 연구역량과 포스코, RIST, TEMC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 상용화를 촉진시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앞당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ESG 경영에 걸맞은 친환경 가스 생산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산업가스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10월 발사 예정 '누리호', 발사대 우뚝

제2 발사대 인증시험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에 착수했다.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한 누리호 인증모델은 1일 오전 7시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출발했으며, 향후 다양한 성능검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전남 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발사체에 추진체 및 가스류 등을 지상에서 공급하기 위한 구조물인 높이 48m의 엄빌리칼 타워는 물론 추진체 공급 및 발사체 기립 장치 등 발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는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산업체 7곳이 기술 국산화를 위해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우주기술과장은 "이번 인증시험은 누리호 인증모델을 활용해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한달간 진행될 계획"이라며 "인증모델은 본 발사에 사용될 모델과 동일한 형상가지고 있어 1일 국민들은 실제로 발사하게 될 누리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난 3월 누리호 1단부 인증모델 종합연소시험이 성공해 성능 검증을 완료한 데 이어, 누리호 발사대 성능 검사까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증모델은 모든 절차가 실제 발사와 동일한 절차로 운영되며, 실제 비행 모델은 10월 발사 1일 전 기립될 예정이다.

발사대 인증시험은 누리호의 각 단을 모두 조립해 3단형 인증모델을 완성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인증모델을 트랜스포터(이송장치)에 싣고 발사대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한 후 발사대로 이송·기립하고, 추진체 충전 및 배출과 같은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3단형 인증모델은 종합연소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을 완료한 누리호 인증모델(QM) 1, 2, 3단을 활용하며, 3단형으로 조립이 완료된 누리호 인증모델은 오는 10월 발사 예정인 비행모델(FM)과 같은 실물 크기로 제작됐다.

발사대 인증시험 절차는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송 및 기립하고 ▲추진공급계 구성품 기능을 점검해 ▲산화제탱크 단독 충전 및 배출하고 ▲연료·산화제탱크 동시 충전 및 배출 1차 및 2차를 거쳐 ▲발사체 고정 장치 분리 및 엄빌리칼 분리와 ▲발사체종합조립동으로 이송하는 등 총 7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채윤성 AI 전문기자 echo@